

	<h1>보 도 자 료</h1>	2021. 12. 20.(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정책본부		
※보도 : 2021.12.20.(월) 13:20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의 자생력 강화와 전환성장”을 위한 7대 공약 발표
- ▲선지원-후정산 방식 보상과 지역화폐 확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대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소공인 종합지원 등 세부공약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고,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 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 여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및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이 후보는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 검토, ▲폐업 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 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재난 시기 임차상인 보호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아닌 임대료 분쟁 해결절차 마련,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플랫폼 시대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을 공약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늘 뒷전”이라고 말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교육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상권 기반 현장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면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그동안 중소기업·자영업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소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도심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 분리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공정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소공인 전용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공약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고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 담당자 : 정책본부 민주연구원 정상희 연구위원(010-8294-2323)

정책본부 기획전략실 송용한 팀장(010-3269-1334)

을지로위원회 기획팀 오정훈 선임팀장(010-2449-6523)